

<문제 1>

물음 1) 행정심판법 제31조의 임시처분에 대한 문제. 임시처분의 요건에 대한 사안 포섭이 중요. 노동행정법 38면 이하.

- 적극적 요건

1)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감(물음 2에서 이미 재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 힌트).

2)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.

3) 당장 추방당할 위험, 가정파탄의 위험.

4) 임시체류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존재.

- 소극적 요건

1) 갑이 한국에 체류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음.

2) 반려처분이므로 집행정지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.

- 결국 인용가능

물음 2)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. 행소법 30조 2항의 재처분의무 사건. 노동행정법 239면 이하.

-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.

- 결국 재거부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

- 따라서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재거부처분은 적법함.

<문제 2>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, 즉 인용요건을 묻는 문제.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. 사정판결은 쟁점 아님. 노동행정법 250면 이하.

1. 무효확인소송의 의의

2. 무효확인소송의 인용요건

3.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

원칙 : 기각판결

예외 :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한 경우, 소 변경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취소판결 가능

4. 사안의 해결

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, 취소판결 가능.

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기각판결.

<문제 3> 관련청구소송의 병합(특히 피고가 다르므로 소의 주관적 병합). 병합요건으로서 주된 청구의 계속의 판단이 중요. 기판력은 논점 아님.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은 주쟁점은 아님(가점). 노동행정법 178면 이하.

- 2개월 경과 전에는 주된 청구의 적법은 당연히 충족
-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주된 청구의 적법이 문제됨. 다만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청구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주된 청구의 적법 요건이 충족.